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박 찬 욱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7대 총선에서는 2표병립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이 상이한 분할투표가 발생했다. 전체 투표 참가자 중 2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의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했다. 대학생, 진보성향, 그리고 민주노동당 선호 유권자의 분할투표 가능성이 두드러졌다. 지역구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후보자를 고르고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 표를 준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4명 정도이다. 양대정당에 2표를 나누어 준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2명꼴이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지지의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1명 가량이다. 나머지 분할투표는 그밖의 다양한 정당간 배합을 보여준다. 지역구선거에서 양대정당 중 어느 하나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민주노동당을 가장 선호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 표를 주고 지역구선거에서는 양대정당 중 좀더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찍은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지의 정당투표와 동시에 열린우리당 후보자를 지지한 분할투표는 17대 국회에서 이 두 정당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하는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로도 해석된다. 양대 정당에 표를 준 분할투표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를 우려한 견제균형 분할투표이며,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에 2표를 나누어 준 분할투표는 지역주의 투표일 가능성이 크다. 2표병립제가 초래한 유권자의 분할투표는 민주노동당이 제3당

*본 논문에서 쓰고 있는 용어표기에 대해서는 부록의 정리를 참고할 것. 17대 총선에서 "1인2표제"라고 불려진 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면 "2표혼합제" 가운데 하나인 "2표병립제"이다. 덧붙여, 2표혼합제는 프랑스에서 하원의원 선출을 위해 2회까지 선거를 실시하는 제도인 "재투표제"와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지위로 부상하는 결과로 직결되었다. 하지만 분할투표자가 전체 투표 참가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 분할투표자 중에서는 양대 정당에게만 표를 주거나 지역주의 투표를 한 유권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의석의 비중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제도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민주노동당이 좀더 강화된 제3당 지위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I. 서론

한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1980년대 말 이후 13대부터 17대에 이르기까지 5회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도를 일별하게 되면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17대 총선에 이른바 "1인2표제"가 도입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3대에서 16대 총선까지 적용된 제도는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일석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전국선거구(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렬적으로 결합시킨 제도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 유권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명부를 선택하는 별도의 1표, 즉 정당투표(party vote)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1인1표혼합제(1표혼합제)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는 비례대표제가 대체로 명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더구나 비례대표의석의 비중은 16대 국회의 예를 들면 의원정수 273석 가운데 46석으로 16.8%에 불과하여 약한 비중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그 혼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아 비례대표제는 물론 준비례대표제라고도 할 수 없었고 다수대표제(다수제), 그 가운데는 단순다수제로 분류되는 데에 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 와서 유권자가 일석선거구 단순다수제 아래 1표로 후보자 1인에게 기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비례대표선거에서도 1표로써 정당투표를 행사하는 1인2표혼합제(2표혼합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종래에 비하여 혼합적 성격이 다소나마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단순다수제라고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파렐(Farrell 1997)과 같은 선거연구가는 선거제도를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로 양분하면서 2표혼합제를 비례대표제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많은 국가

들이 2표혼합제를 채택하게 되면서, 이 제도는 별도의 범주로 설정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마시코트와 블레이스(Massicotte and Blais 1999)는 총 170개국의 의회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유형별로 국가의 수를 보면 단순다수제 58개국, 절대다수제 23개국, 비례대표제 60개국, 그리고 혼합제는 29개국(거의 대부분이 2표혼합제)이었다. 물론 2표혼합제는 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독립적 아니면 종속적 형태로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은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이를테면, 2표병립제와 2표혼합비례제의 구분이 그것이다. 전자에서는 다수제 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 의석배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제도는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채택되고 있다. 물론 한국도 17대 총선부터 2표병립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의 득표 결과에 따라 먼저 정해지고 각 정당은 정해진 의석수로부터 다수제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를 빼고 남은 수만큼의 비례대표의석을 할당받는다. 독일과 뉴질랜드가 이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졸고 2000a).

이 논문은 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가 도입되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2표병립제에서 종전보다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된 유권자는 지역구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는 분할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일관투표를 하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종전의 제도가 초래하지 않았던 미시적 수준의 효과인데, 선거결과 각 정당이 국회에서 대표되는 상대적 비중과 정당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이 논문은 2표병립제의 거시적 효과를 논의하기 이전에 유권자의 분할투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분할투표 현상은 2표병립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인 유권자에게 새롭게 나타난 양상이며, 따라서 투표행태 연구에서 흥미로운 새 주제이기도 하다. 17대 총선에서 대체로 어떤 부류의 유권자가 어떻게 왜 분할투표를 했는가하는 것이 본 논문이 해답하려는 질문인 것이다.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에 관한 기존의 분석은 총선 후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두 편 정도에서 찾아진다(이현우 2004; 김왕식 2004). 이 연구들은 분할투표에 대한 의미있는 서술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분할투표의 설명에 치중하는 심화 작업을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제의 성격상 총선 이후에 유권자 수준에서 수집된 면

접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선거 직후 학술적 연구를 위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왕식의 논문(2004)과 마찬가지로 이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II. 17대 총선과 2표병립제의 도입

17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 1표씩 모두 2표를 행사하게 된 것은 수년간 전개된 개혁 시도가 맺은 뜻있는 결실이다.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수나 득표율에 의거하여 배분하는 것이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 아울러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2표병립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시민운동단체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었다(예를 들면, 양건 1995; 졸고 1997; 『의정감시』 1999). 그리고 정당간에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전개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개정 협상 과정에서 2표병립제 도입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즉 15대 국회 말인 2000년 1월 15일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의 원내총무들이 이 제도를 채택한다고 일단 합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9일 새벽에 최종 통과된 선거법은 그 합의를 실현하지 않았다. 당시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유권자 1인에 2표를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였고 새천년민주당은 이를 추진하였다. 한동안 새천년민주당과 공동여당의 지위에 있었던 자유민주연합이 그 때로서는 아직 양당 공조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지만 16대 총선에서 양당의 연합전략 가능성은 이미 희박해진 형국이었다. 결국, 자유민주연합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자당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한나라당과 더불어 2표병립제의 도입을 무산시켰다(졸고 2000b, 62-63).

청렴정치국민연합이 2000년 2월 10일,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그리고 이어 새천년민주당소속 의원들은 22일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제를 위해 별도의 1표를 부여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 심리하고 2001년 7월 19일 당시 공선법 제146조 제2

항 중 "1인1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선거와 병행하여 비례대표선거를 실시하면서도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없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擬制)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지하는 지역구후보자가 소속한 정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같지 않을 때에 1인이 1표만을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그 의사를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대표선거에 반영되지 못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강요되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역구선거와 병행하여 비례대표선거가 실시되면 유권자가 여기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함을 명료하게 밝혔던 것이다(2001. 7. 19. 2000헌마91 · 112 · 134(병합)).

이 판결 이후 참여연대, 경실련,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개혁을 위한 공선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의 사항으로서 1인2표에 입각한 혼합제 채택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01/12/10). 국회는 2002년 3월 7일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1차적으로 지방선거 수준에서 2표병립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6월 13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682인의 시 · 도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비례대표의원이었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유권자가 별도의 1표를 행사하여 정당명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1] 2003년 2월 17일에는 국회의원 60여명, 국회에 진출하지 않은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의 주요 당직자 17명,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70여명, 학계와 법조계 인사 3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는 국민참여를 통해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한 기구로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정치개혁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였다. 이 기구는 입법청원

1) 비례대표선거 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 및 의석수는 다음과 같았다. 한나라당 49.3%로 36석, 새천년민주당 30.1%로 22석, 민주노동당 12.3%로 9석, 자유민주연합은 5.5%로 4석, 미래연합 2.8%로 2석이었다.

을 위해 같은 해 4월과 6월 2차에 걸쳐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합의사항에는 비례대표의석의 비중이 확대된 2표병립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2003, "정치개혁안 의견청원서," http://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 = 8566&page = 2&section = politics(검색일 2004-08-25)).

한편, 2003년 11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정당,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 11인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가 같은 해 12월 8일 발표한 개혁안에는 국회의원정수를 299인으로 확대하고 이는 일석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의원 199인과 전국구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 100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각각에서 1표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 비례대표제의 선거구 계층(전국구 또는 권역선거구), 지역구의 선출정수와 선거구획정 등에 있어서 정당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

표 1. 16대와 17대 총선의 선거제도 비교

역대 국회	유권자당 투표수	선거구 계층	당선결정 방식	선출정수	선거구수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석비중	봉쇄조항
16대	1	지역구	단순다수	1	227	273	16.8%	지역구 5석 또는 전국득표 5%이상(3% 이상 5% 미만 정당은 1석)
		전국구	비례대표: 최대잔여-헤어 방식	46	1			
17대	2	지역구	단순다수	1	243	299	18.7%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선거 전국득표 3% 이상
		전국구	비례대표: 최대잔여-헤어 방식	56	1			

결에서 공선법 개정시한으로 정한 2003년 12월 31일을 넘기게 되었다(2001. 10. 25. 2000헌마92 · 240(병합)). 결국, 공선법 개정안은 17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04년 3월 12일에 가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표 1은 16대와 17대 총선의 선거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제시한다. 일석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각 선거구 계층을 연계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혼합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의원정수는 16대의 273인이 17대에서 299인으로 확대되었는데,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의 구성비는 227 대 46(4.9: 1)에서 243 대 56(4.3: 1)으로 변경되어 비례대표의석의 비중은 16.8%에서 18.7%로 단지 근소한 정도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의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봉쇄조항은 16대 총선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국득표율이 3%이상 5%미만인 정당에게는 1석이 배분되도록 마련되었다. 즉 사실상의 봉쇄조항은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전국득표율 3%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17대 총선에 와서는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득표율 3%이상으로 되었으므로 비례대표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는 최소요건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16대와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선거의 당선결정방식 또는 의석배분규칙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었다(2004. 3. 12. 개정 공선법의 189조 ③). 이는 헤어 기준수에 의거한 최대잔여방식으로 규정된다. 결국,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유권자에게 1표가 아니라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 1표씩 모두 2표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III.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자: 누가?

17대 총선에서는 1인이 2표씩을 찍는다고 하여 어떻게 하는 것인가하고 의아해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3월말이나 4월초에 실시된 유권자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2표의 행사 방식을 제대로 안다고 말

한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 정도를 약간 상회하였다(3월 26일 코리아리서치 조사; 4월 5일 리서치플러스 조사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표혼합제의 투표방법을 홍보했음에도 선거 일주일 전의 시점에서도 "좋아하는 후보에게 2표를 몰아 찍어도 되는가," "선택한 후보자 2인의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찍어야 하는가," "선택한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이 다르면 무효가 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중앙선관위 『선거소식2004-29』 04/4/8). 선거 당일에는 투표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는 투표자나 투표용지 2장을 동일한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는 투표자의 사례도 목격되었다(동아일보 04/4/16; 국민일보 04/4/15). 하지만, 전반적으로 17대 총선에서 2표혼합제로 말미암아 초래된 혼란은 미미한 정도였고 거의 대부분 유권자들은 2표혼합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자신의 참정권을 당당히 행사했다고 판단된다.

1인의 유권자가 던진 2표 모두가 유효하다면 그의 투표행위는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 아니면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이다. 즉 전자는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상이한 종류의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에도 동일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면 전자의 개념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종래의 "일괄투표"라고 번역하는 국문표기 대신 "일관투표"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일괄투표란 표현은 통상 다석 단순다수제 맥락에서의 특정한 당선결정방식 내지 의석배분규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행태로서의 분할투표와 반대되는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싱가포르 의회선거에서 정당일괄투표(party bloc vote)는 유권자가 1표를 행사하여 정당명부를 선택하고 선거결과 단순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당해 선거구의 선출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석권하게 마련한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단위로 유권자가 행사한 유효표총수의 단순다수를 획득하여 승리한 후보자가 일정수의 선거인단표를 독식하는 제도(winner-takes-all)도 동일한 예이다.[2)]

---

2) 참고로, 다석 선거구에서 선거인이 선출정수와 동일한 수의 표를 갖고 후보자의 정당소속을 불문하고 상이한 후보자를 선택한 다음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는 완전연기투표 제도의 영문표기는 "block vote" 또는 "bloc vote"이다.

17대 총선에서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가? 즉 얼마나 많은 투표참가자들이 지역구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의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지한 정당이 다르게 투표했는가? 이것이 분할투표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점이 되는 질문일 것이다.

분할투표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구 단위별로 공식 집계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와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현우(2004)는 지역구를 단위로 단순다수제 하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득표(candidate vote)의 수와 비례대표선거의 당해 정당투표의 수 간 절대값 차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한 다음에 정당간 중복계산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10% 정도가 분할투표 비율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경우에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현우의 분석에서 이미 시사되었듯이 선거구 수준의 집합자료를 가지고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개인의 행태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태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후보자득표수와 정당투표수의 차이는 분할투표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으로써 분할투표의 비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기는 어렵다. 심지어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동일한 표수를 얻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분할투표가 무시 못 할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 5인으로 구성되는 선거구({가, 나, 다, 라, 마})에서 3개 정당({A, B, C})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고 정당명부를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유권자 가는 지역구선거에서 A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C정당을 선택했다면 이는 {A, C}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유권자인 나, 다, 라, 마의 투표선택은 각각 {A, B}, {C, A}, {B, A}, {C, C}라고 하자. 선거결과 A, B, C 3개 정당별 후보자득표수는 각각 2표, 1표, 2표가 되고 정당투표수의 분포도 이와 동일하게 된다. 집합자료를 토대로 분할투표 비율을 구하면 0%가 되는데, 실제로 유권자 수준에서는 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유권자 4명이 분할투표를 하여 그 비율은 80%가 된다. 요컨대, 집합자료를 통해 얻은 분할투표 비율은 기껏해야 추정치의 하한선이 될 것이다.

유권자 수준에서 분할투표의 비율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유일하다. 뉴질랜드 법무부의 선거총괄국(Chief Electoral Office)은 총선 후에 분할투표자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2표혼합비례제가 적용되는 뉴질랜드 의회선거에서는 독

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의 소속정당, 그리고 비례대표선거에 명부를 제출한 정당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등재되어 있어 유권자의 2표가 모두 여기에 기표된다. 이 경우에는 무기명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세심한 검표(檢票)를 거쳐 분할투표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뉴질랜드 총선에서 분할투표자 비율은 2표가 모두 유효인 전체투표참가자 중 1996년 37.0%, 1999년 35.2%, 2002년 39.0%이었다.[3)]

다른 국가의 경우에 뉴질랜드와 같이 유권자 수준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질문지나 전화를 통한 유권자조사(survey)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구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지한 정당이 상이한지의 여부를 유권자에게 직접 묻는 문항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구의 지지 후보자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을 각각 따로 물은 다음에 연구자가 분할투표 여부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17대 총선 직후의 한국갤럽조사(조선일보 04/4/20)나 이현우(2004)의 조사는 전자의 예인데 무응답을 제외하고 계산할 때에 분할투표 비율이 각각 35.3%와 34.1%가 된다. 집합자료에 의한 10% 정도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에 현저히 높은 비율이며 분할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해지는 뉴질랜드의 경우에 접근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아서 30%를 상회하는 수준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에게 분할투표 여부를 직접 묻게 되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의 선택을 따로 물은 다음에 연구자가 사후에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 비하여 응답자에게 부담을 더 주고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고 있는 유권자조사 자료는 선거일 직후 상이한 선거 맥락에서의 선택을 독립적으로 물어 얻어진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투표에 참가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응답한 1,110명 가운데 분할투표는 20.8%, 일관투표는 79.2%로 제시된다. 투표자 매 10명 중 2명 정도가 분할투표자였다는 것이다. 집합자료에 의거한 추정보다는 높지만 한국갤럽조사의 결과보다는 낮은데, 17대 총선에서 분할투표 비율이 20%를 약간은 상회하더라도 30%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

3)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2004년 8월 중순에 이메일을 통해 뉴질랜드 선거총괄국의 윌리엄슨(Mike Williamson) 씨를 접촉하여 문의한 바 있다.

참고로, 이 논문이 분석하는 조사와 동일한 방식의 질문으로 수집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할투표 비율을 추정한 외국 사례를 들자면 그쉬벤트와 그의 동료들은(Gschwend, Johnston, and Pattie 2003, 111) 1998년 독일 총선 이후에 국가선거사후조사연구(German National Post-Election Study)를 통해 분할투표 비율을 22.1%로 추정하였고, 히라노(Hirano 2004, 6)는 일본의 2001년 참의원선거 사후조사(Japanese Election Study III)를 토대로 이 선거에서의 분할투표 비율을 38.3%로 제시했다.[4] 덧붙여, 1995년 러시아 하원선거 이후의 유권자조사는 분할투표 비율을 약 38%라고 밝혔다(McAllister and White 2000, 571).

분할투표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의 중요한 질문은 유권자 중에서 누가 분할투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유권자인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좀더 구체화하면 분할투표자를 일관투표자와 비교할 때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정치정향에 비추어 어떤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에 대한 이현우(2004)의 분석은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분할투표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분할투표 비율이 가장 낮으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분할투표 비율이 대체로 높아진다. 학력에 비추어서는 중졸이하 집단으로부터 고졸 집단을 거쳐 대재이상 집단으로 갈수록 분할투표 비율이 증가했다. 직업유형별로 볼 때 학생집단의 분할투표 비율이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집단의 비율도 높은 편인 반면 가정주부의 분할투표 비율이 가장 낮고 무직과 자영업 집단이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할투표 행태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점과 정치에 대한 지식 및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분할투표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2에서 보면 성별, 연령, 직업유형의 3변수는

4)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일본의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2표병립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양국 총선에서의 분할투표 비교를 위해서는 제도의 상이점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이중입후보를 허용하기 때문에 지역구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도 비례대표선거의 정당명부에 등재되어 석패율(惜敗率)을 높여 "부활" 당선될 여지가 있어 이것이 분할투표를 억제하는 압력을 유권자에 줄 것이다. 참의원의 경우 2001년 선거부터 비례대표선거에 구속명부 대신에 개방명부가 도입되었다. 즉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1인을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지명도나 인기도가 높은 후보자를 지지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것은 분할투표를 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2.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분할투표 여부

변수	일관투표 (%)	분할투표 (%)	사례수	카이 자승(유의수준)	크레이머 브이
전체	79.2	20.8	1,110		
성별			1,110	4.210(<0.05)	0.06
남자	76.7	23.3	558		
여자	81.7	18.3	552		
연령			1,110	8.534(<0.05)	0.09
20대	75.2	24.8	202		
30대	77.8	22.2	275		
40대	77.0	23.0	283		
50대 이상	84.3	15.7	350		
학력			1,070	2.913(0.23)	0.05
중졸 이하	81.4	18.6	194		
고졸	76.6	23.4	496		
대재 이상	80.5	19.5	380		
거주지역			1,110	7.590(0.11)	0.08
수도권	79.7	20.3	537		
강원	78.9	21.1	38		
충청	77.4	22.6	106		
호남	70.9	29.1	127		
영남	82.5	17.5	302		
직업유형			1,011	17.61(<0.01)	0.13
화이트칼라	77.8	22.2	189		
블루칼라	76.1	23.9	113		
자영업 · 농업	80.4	20.8	291		
학생	65.1	34.9	106		
주부	81.2	18.8	218		
무직/은퇴	87.2	12.8	94		

0.05의 유의수준에서 일관투표자 집단과 분할투표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내용적으로 이현우의 분석과 일치한다. 다만 학력과 이 논문의 분석에서 추가된 지역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지역변수의 경우 호남 유권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할투표 비율과 영남 유권자의 상대

표 3. 유권자의 정치정향 변수와 분할투표 여부

변수	일관투표 (%)	분할투표 (%)	사례수	카이 자승(유의수준)	크레이머 브이
전체	79.2	20.8	1,110		
이념성향[a]			948	14.558(<0.01)	0.12
매우 진보(0-1)	70.2	29.8	114		
진보(2-4)	73.1	26.9	290		
중도(5)	78.9	21.1	275		
보수(6-8)	83.8	16.2	204		
매우 보수(9-10)	86.2	13.8	65		
정치지식[b]			1,110	6.612(<0.05)	0.08
낮음(0-1)	85.5	14.5	55		
중간(2)	85.6	14.4	160		
높음(3)	77.7	22.3	895		
열린우리당선호[a]			1,044	17.869(<0.01)	0.13
매우 싫다(0-1)	87.8	12.2	115		
싫다(2-4)	81.7	18.3	224		
그저 그렇다(5)	70.4	29.6	189		
좋다(6-8)	76.0	24.0	342		
매우 좋다(9-10)	82.8	17.2	174		
한나라당선호[a]			1,065	16.210(<0.01)	0.12
매우 싫다(0-1)	74.6	25.4	291		
싫다(2-4)	77.8	22.2	266		
그저 그렇다(5)	79.4	20.6	175		
좋다(6-8)	77.6	22.4	223		
매우 좋다(9-10)	92.7	7.3	110		
민주노동당선호[a]			978	42.159(<0.01)	0.21
매우 싫다(0-1)	88.2	11.8	110		
싫다(2-4)	83.3	16.7	227		
그저 그렇다(5)	85.4	14.6	239		
좋다(6-8)	71.4	28.6	304		
매우 좋다(9-10)	61.2	38.8	98		
새천년민주당선호[a]			1,039	7.435(0.12)	0.09
매우 싫다(0-1)	77.3	22.7	264		

표 3. (계 속)

변수	일관투표 (%)	분할투표 (%)	사례수	카이 자승(유의수준)	크레이머 브이
싫다(2-4)	77.6	22.4	424		
그저 그렇다(5)	85.4	14.6	108		
좋다(6-8)	77.2	22.8	127		
매우 좋다(9-10)	69.2	30.8	26		

주: [a]11점 척도(0-11); [b]대통령의 이름, 국회의원 임기, 국무총리의 이름을 묻는 3문항에 대한 정답의 합계를 가리킨다.

적으로 낮은 분할투표 비율이 대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5)]

외국의 2표혼합제 아래 발견되는 분할투표에 대한 연구는 정당선호나 정치지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분할투표 가능성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즉 그쉬벤트 등의 독일총선분석(2003, 571)과 카프 등의 뉴질랜드총선분석(Karp and others 2002, 16)은 정당을 선호하거나 그것에 애착을 느끼는 정도가 약할수록 분할투표 성향은 강해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후자의 연구는 또한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높아짐도 보여주었다. 한편,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분할투표 관계를 살펴 본 이현우(2004)의 분석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더 높은 분할투표의 비율을 보여주는 비선형 곡선관계를 제시하였다.

표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보면 진보적일수록 확연하게 분할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형관계가 발견된다. 0.0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다. 이현우의 분석과는 아주 다른 결과이다. 유권자가 대통령의 이름, 국회의원 임기 및 국무총리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가에 따라 측정한 정치지식수준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에 있는 유권자 집단의 분할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보여주고, 외국의 연

5) 이 논문을 위한 분석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던 김왕식(2004)의 분석결과는 여기서와 다르게 직업유형과 분할투표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무응답이 많은 단일 문항에만 의존하고 관련 문항과의 결합을 통해 주부나 학생 등 다른 범주를 포함시키는 통계적 조작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들과 일치된 방향의 결과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정당선호도는 어떤 정당인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강한 선호와 분할투표는 역의 관계를 보여준 반면에 17대 총선에서의 정당선호와 분할투표의 상관관계는 어떤 정당인가를 감안해서 논의해야 한다. 유권자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각각에 대한 선호도는 싫어하는 정도가 가장 심한 0점으로부터 좋아하는 정도가 가장 심한 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써 측정되었다.[6] 열린우리당에 대한 선호는 그저 그러한 중간 정도에서 분할투표 비율이 가장 높고 양쪽으로 싫거나 좋아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한나라당 선호도는 매우 좋아하는 수준에서 분할투표의 비율의 가장 낮고 매우 싫어하는 수준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형관계가 나타난다. 민주노동당 선호도가 내용적으로 가장 주목될 만하다. 이 정당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현저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어떤 유형의 분할투표가 많이 발견되는가를 시사한다. 이 3개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새천년민주당선호와 분할투표의 관계는 열린우리당의 경우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지만 통계적 의미는 무시할 만하다.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에 관한 선행연구(이현우 2004; 김왕식 2004)에서는 통계성 유의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정치정향 변수가 각각 분할투표 여부와 보여주는 양변수 관계만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7대 총선에서 누가 분할투표 행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냈는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표 2와 표 3에서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 독립변수만을 골라 로짓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분석결과

6) 정당선호는 특정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의 기조가 가져다주는 효용을 유권자가 합목적적으로 계산한 결과일 수도 있고, 당해 정당의 지도자나 다른 상징에 대하여 갖는 유권자의 정서적 일체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 양자가 배합된 소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선호는 특정 정당과 유권자 간에 정책입장이 상대적으로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적 함의가 없이 그 정당의 지도자 개인과의 비공식적 및 감정적 유대가 깊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당선호의 기원을 문제시하지 않고, 일단 유권자의 정당선호가 주어진 다음 과연 그 유권자가 선거에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행위를 하는가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표 4. 유권자의 분할투표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독립변수	계수 B(표준오차)	유의수준
상수	-1.701(0.700)	<0.05
성별(여자 기준)	0.169(0.206)	0.41
연령(50대이상 기준)		
20대	-0.173(0.382)	0.65
30대	0.052(0.260)	0.84
40대	0.336(0.249)	0.18
직업유형(무직/은퇴 기준)		
화이트칼라	0.201 (0.399)	0.61
블루칼라	0.290(0.428)	0.50
자영업(농업포함)	0.195(0.390)	0.62
학생	1.066(0.471)	<0.05
주부	0.461(0.436)	0.29
이념성향(진보-보수)[a]	-0.092(0.043)	<0.05
정치지식[b]	0.006(0.186)	0.98
열린우리당선호[a] * 열린우리당선호[a]	-0.008(0.003)	<0.05
한나라당선호[a]	-0.047(0.035)	0.18
민주노동당선호[a]	0.157(0.038)	<0.01
-2로그우도	830.560	
카이 자승	51.662	<0.01
예측적중율	77.0%	
사례수	814	

주: [a]11점 척도; [b]3점 척도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중추적인 독립변수 4가지가 드러났다. 그것은 직업유형의 범주 가운데 학생여부, 유권자의 이념성향, 열린우리당선호와 민주노동당선호이다. 다변수분석의 맥락에서 이러한 중추적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 연령층과 같은 다른 변수들은 분할투표 여부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무직이나 은퇴 등 취업을 하지 않은 유권자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에 학생집단은 17대 총선에서 분할투표 행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유권자의 이념성향은 보수로부터 진보의 방향으로 갈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커진다. 열린우리당선호와 분할투표 관계는 비선형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에 대

하여 중립적인 태도로부터 양 방향의 강한 호의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로 갈수록 분할투표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유의수준 등으로 보아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민주노동당선호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호의적 ·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수록 분할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17대 총선에서는 진보성향이 강하거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거나 또한 대학생 유권자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유권자에 비하여 분할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러한 결론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왜 분할투표를 했는가하는 질문에 해답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IV.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 행태: 어떻게, 그리고 왜?

1. 분할투표의 유형

17대 총선이 2표병립제 아래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역구선거에서 아주 소수만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거나 심지어 단 한 석도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군소정당도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득표율 3%의 진입장벽을 넘어 의석진출을 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2표병립제는 군소정당의 선거참여와 국회진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실제로,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공화당을 포함한 8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17대 총선에 와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하여 국민통합21, 가자희망2080,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당,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 민주화합당, 사회당 등 14개에 이르는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명부를 제출하였다. 14개 정당 가운데 지역구선거에 후보자를 낸 선거구수로 보아 100군데 이상인 정당은 열린우리당(243), 한나라당(218), 새천년민주당(182), 자민련(123), 민주노동당(123) 등 5개 정당에 그쳤고, 그 다음으로는 녹색사민당이 28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었으며, 나머지 8개 정당은 각각 10개 미만의 지역구선거에서만 경쟁에 가담하였다.[7] 이렇게 선거참여 정당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외양에 있어서 선택의 메뉴가 다양해졌다.

17대 총선에서 행해진 분할투표의 유형을 서술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선의 경쟁구도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학계 내외를 막론하고 총선분석가들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3월 12일에 이루어진 국회의 대통령탄핵이 압도적 최대쟁점이 되어 경쟁구도를 결정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강원택 2004; 윤종빈 2004; 조성대 2004). 그리고 쟁점 이외에도 주요 정당이 신인을 대거 공천하고,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주어지는 등 지역구선거에서조차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고 전국적 경쟁구도에 매몰되는 측면이 아주 농후했다. 한편, 총선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 여러 상업적 여론조사기관들은 정당의 지지도와 지역구후보자의 인기 및 당선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공식적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리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에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개괄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선거 판세를 보도하였다. 전국적 경쟁구도는 대통령 탄핵 직후 수일 동안은 열린우리당의 독주로 특징지어졌으나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한나라당이 점차 추격하여 양강구도에 근접하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군소정당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대정당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3당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점쳐졌다.[8] 지역구선거의 판도를 보면, 대전과 충남의 일부에서 자유민주연합, 광주와 전남의 일부에서 새천년민주당, 울산과 경남의 일부에서 민주노동당의 소수 후보자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양대정당이 각축하는 양상이 뚜렷하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인 http://www.nec.go.kr의 17대 총선 자료를 참조할 것. 지역구선거에서는 224명의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하여 총 1,175명이 입후보하였고 경쟁률은 4.8대 1이었다.

8)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인 3월 30일의 시점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무응답에 대한 판별분석을 거친 후 각 정당의 지지도를 열린우리당 49.4%, 한나라당 32.6%, 민주노동당 10.3%, 새천년민주당 6.0%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선거일 직전의 한 신문기사는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4일 현재 전국 판세 점검 결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양대 정당으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진보적인 민주노동당과 개혁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사이드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문화일보 04/4/14, 3).

표 5. 지역구 지지후보자 소속정당과 비례대표선거 지지정당 (%, 사례수)

지지 후보자 소속정당	비례대표선거 지지정당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 연합	기타 정당	합계
열린 우리당	40.1 (87.8) 445	2.1 (6.4) 23	5.6 (43.1) 62	1.2 (18.3) 13	0.1 (7.1) 1	0.5 (46.2) 6	49.5 550
한나라당	2.3 (4.9) 25	29.5 (91.1) 328	2.6 (20.1) 29	0.5 (7.0) 5	0.3 (21.4) 3	0.1 (7.7) 1	35.2 391
민주 노동당	0.7 (1.6) 8	0.1 (0.3) 1	3.8 (29.2) 42	0.1 (1.4) 1	0 (0) 0	0.1 (7.7) 1	4.8 53
새천년 민주당	1.6 (3.6) 18	0.2 (0.6) 2	0.5 (3.5) 5	4.5 (70.4) 50	0 (0) 0	0.2 (14.3) 2	6.9 22
자유민주 연합	0.6 (1.4) 7	0.4 (1.1) 4	0.1 (0.7) 1	0 (0) 0	0.9 (71.4) 10	0 (0) 0	2.0 77
기타 정당	0.4 (90.8) 4	0.2 (0.6) 2	0.5 (3.5) 5	0.2 (2.8) 2	0 (0) 0	0.4 (30.8) 4	1.5 17
합계	45.7 (100.0) 507	32.4 (100.0) 360	13.0 (100.0) 144	6.4 (100.0) 71	1.3 (100.0) 14	1.2 (100.0) 14	100.0 1,110

주: 각 칸의 맨 위 백분율은 전체 투표자(1,110명) 중에서, 괄호 안의 백분율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 정당을 지지한 응답자수 중에서 당해 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무응답', '모름', '무효표', '무소속'은 제외되었다; 카이 자승 = 1861.647, 유의수준 < 0.01; 크레이머 브이 = 0.58, 유의수준 < 0.01.

게 부각되었다.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크게 보아 양강구도에서 각자 2표를 행사하였는데 이

논문이 분석하는 선거후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표 5와 같은 투표선택 양상이 밝혀졌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전체 투표자 중 일관투표 대 분할투표 비는 79.2: 20.8이다. 대각선상의 각 칸은 일관투표 비율과 사례수를 제시한다. 전체 투표자 중 지역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자를 선택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사람이 40.1%로 가장 많다. 이어서 한나라당에 일관투표를 행한 사람은 29.5% 정도이다. 투표자 매 10명 중 7명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어느 한 곳에 2표를 몰아주었다. 그 중 1명 정도만 군소정당 일관투표자이고 2명은 분할투표자인 것이다.

각 칸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지지표를 100으로 놓고 볼 때 그 가운데 지역구선거에서도 해당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선택한 표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가리킨다.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자들을 기준으로 일관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즉 분할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도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자들 가운데 일관투표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즉 분할투표자는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 양대정당들과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중 29.2%만이 지역구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찍었고, 나머지 70.8%는 분할투표를 했다. 민주노동당과 같이 군소정당으로 간주되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양대정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쯤에 속하는 일관투표 또는 분할투표 비율을 보여준다.

17대 총선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의석을 할당받은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다른 정당의 경우에 비해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비율이 70.8%로 특히 높다. 선거 후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투표자들의 78.3%가 지역구선거에서는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했다(조선일보 04/4/20). 이 수치는 본 논문의 분석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민주노동당 정당투표자의 분할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유권자가 종전과 같이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별도의 1표 없이 오직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뽑는 1표만을 행사하였더라면 민주노동당 정당투표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후보자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었을 것으로 암시된다. 결국, 2표병립제는 민

주노동당이 지역구 의석수에서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보다도 부진했으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제3당의 위치로 부상하는 데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2표병립제나 2표혼합비례제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 총선의 결과를 표 5의 결과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공통점 하나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정당투표수를 분모로 하여 분할투표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정당보다는 군소정당의 분할투표 비율이 높다. 이것은 1인2표 대신에 1인1표의 제도 하에 군소정당의 의석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뉴질랜드의 2002년 12월 총선 결과, 노동당(120석 중 52석 확보)과 국민당(120석 중 27석 확보) 양대정당의 분할투표 비율은 각각 20.0%와 18.2%였다. 반면, 제3당 이하 정당의 경우를 보면 뉴질랜드제일당(New Zealand First Party, 13석)이 77.1%, 자유뉴질랜드당(ACT New Zealand, 9석)은 76.1%, 녹색당(9석)은 59.7%, 통합미래당(8석)은 67.3%, 마지막으로 진보연합(2석)은 72.0%였다(http://www-ref.electionresults.org.nz/splitvotes/splitvoting.html(검색일 04/8/25)).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독일의 의회총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Hirano 2004;

표 6. 분할투표 유형별(지역구 지지후보자의 소속정당/비례대표선거 지지정당) 분포

유형	사례수(%)	세부유형(사례수)
대정당/ 군소정당	120(51.9)	**우/노**(62), **한/노**(29), **우/민**(13), 우/기(6) 한/민(5), 한/자(3), 우/자(1), 한/기(1)
대정당/ 대정당	48(20.8)	**한/우**(25), **우/한**(23)
군소정당/ 대정당	46(20.0)	**민/우**(18), 노/우(8), 자/우(7), 기/우(4) 자/한(4), 민/한(2), 기/한(2), 노/한(1)
군소정당/ 군소정당	17(7.4)	민/노(5), 기/노(5), 민/기(2), 기/민(2) 노/민(1), 노/기(1), 자/노(1)
합계	231(100.1)	

주: 우 = 열린우리당, 한 = 한나라당, 노 = 민주노동당, 민 = 새천년민주당, 자 = 자유민주연합, 기 = 기타정당; 기타 정당/기타 정당은 일관투표에 포함되었다; 사례수가 비교적 많은 세부유형은 굵게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Gschwend, Johnston, and Pattie 2003; 김영태 2002). 군소정당은 지역구선거에서 경쟁력이 약하여 공천하는 후보자 수도 작게 마련이므로 비례대표선거에서의 군소정당 지지자가 지역구선거에서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표를 던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서의 정당간 우열관계 즉 경쟁구도는 분할투표를 서술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표 5의 일부를 다시 정리한 표 6은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의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을 순서대로 짝지어 (1) 대정당/군소정당, (2) 대정당/대정당, (3) 군소정당/대정당, (4) 군소정당/군소정당의 4가지 분할투표 유형별로 사례수와 그 세부내용을 제시한다. 제1유형이 분할투표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각된다. 제1유형 가운데는 지역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표를 찍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사례수는 거의 비슷한데 각각 20%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7% 수준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분할투표 이론

1)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면서 일석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의 심리에 미치는 요인으로 말미암아 양당체계를 유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일석 단순다수제 아래 3인 이상의 후보자(또는 3개 이상의 정당)가 경쟁하는 경우에 당선 및 승리 가능성이 낮은 제3위 이하의 후보자(또는 정당)를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가 사표화될 것을 우려하여 당선 및 승리 가능성이 높은 다른 후보자(또는 정당) 중 선호순위가 좀더 앞선 후보자(또는 정당)를 선택하게 되어 결국에 양당체계가 초래된다고 하였다(Durverger 1954, 226). 여기서의 유권자 행위가 곧 사표방지 전략적 투표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는 유권자가 진정한 선호에 의한 제1순위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순위의 경쟁주체를 선택하는 비순수투표(insincere voting)이다.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또는 정당) 간의 경쟁구도와 승패가능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제1순위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의 표가 당선 또는 승리를 가리는 데에 별로 쓸모가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장 바라지 않은 낮은

선호순위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사표방지 전략적 투표는 일석 단순다수제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지만, 콕스는 이외에도 단일계층(single-tier) 선거구에서의 비례대표제와 절대다수제 결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M + 1 규칙"으로 일반화하였다. 콕스에 의하면 2이상인 M의 선출정수를 가진 선거구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전략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선 또는 승리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경쟁주체의 수에 있어서 상한은 균형수인 M + 1이라고 하였다(Cox 1997, 139-148).

2표혼합제에서는 어떤 내용의 분할투표가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인가? 분할투표 개념이 정당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시 되는 유권자선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망라하여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선호이다. 비례대표선거는 전적으로 정당선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지역구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들에 대한 선호가 그 소속정당들에 대한 선호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자의 선호는 후자에 대한 선호가 미치는 제약효과로 말미암아 대체로 거의 같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분할투표는 동일한 유권자가 상이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정당선호순위에 비추어 2표 가운데 적어도 1표의 행사는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선호에 부합하는 순수투표(sincere voting)가 아닐 것이다. 일석 단순다수제에서는 비순수투표와 전략적 투표의 개념은 서로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2표혼합제에서 나타나는 분할투표를 전략적이라고 할 때는 비순수투표라는 점을 넘어서는 특정한 의미에서 규정해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뒤에서 논의되듯이 사표방지와 연합보장의 의도를 가진 유권자의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할투표가 초래된 경우만을 전략적 분할투표로 본다. 우선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를 규정하자면, 특정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진정한 선호 그대로 해당 군소정당을 지지하지만 다수제가 적용되는 지역구선거에서는 경쟁구도상 당선가능성이 있는 대정당 가운데 좀더 선호하는 대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표혼합제 아래 발견되는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에 대한 분석이 적지 않다. 독일 총선에서 양대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명부 득표율보다 일석 지역구 득표율이 높은 반면에 군소정당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상당부분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에 기인한다. 즉 비례대표선거

에서 제1선호에 맞게 군소정당에 표를 주는 유권자도 지역구에서는 군소정당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표가 사표화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Jesse 1988; Gschwend 2003).

코노는 일본의 1996년 중의원 선거를 집합자료에 의거 분석하였는데,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정당 득표수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그 정당투표수로 나누어 자민당같은 대정당의 경우 그 값이 대체로 1보다 훨씬 크지만 공산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그 값이 전반적으로 1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노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지역구선거에서 경쟁력이 약한 공산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에 전략적 분할투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Kohno 1997, 436-439). 한편, 히라노(Hirano 2004, 2-3; 10)는 2001년 참의원 선거 후의 유권자조사 자료를 토대로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선거에서 그 정당을 지지하고 지역구(현 단위)선거에서는 그보다 낮은 선호순위의 정당이 낸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가 분할투표자총수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고 추정했다. 여기서 히라노는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했음에도 대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한 경우에만 전략적 투표의 개념을 적용했다. 그런데 군소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전략적 투표의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한데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언급된다.

2) 연합보장(coalition insurance) 전략적 분할투표

전략적으로 분할투표를 하는 것은 통상 사표방지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2표혼합제 아래 총선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총선 이후 정당간 연합을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특정 정당들간의 연합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다. 이것이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인데 이 개념은 대정당과 군소정당을 구분하는 경쟁구도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당간의 이념성향 및 정책입장에 있어서 근접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쉬벤트에 의하면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는 당초 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에서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는 대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우선 지역구선거에서 진정한 선호대로 해당 대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그 대정당과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할 군소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를 하는 것이다(Gschwend 2003). 그런데 1996년 이탈리아 선거에서의 분할투표를 분석한 베노이트 등(Benoit, Giannetti, and Laver 2000)이나 독일 총선에서의 분할투표를 연구한 예쎄(Jesse 1988)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제1선호에 따라 군소정당에 정당투표를 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단지 사표화 방지가 아니라 이념이나 정책에 비추어 그 정당과 연합이 예정된 대정당의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것을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의 총선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하는 집행연합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념 · 정책적 근접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연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쉬벤트와 베노이트의 주장을 모두 포괄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의 개념을 정립한다. 즉 유권자가 지역구선거든 비례대표선거든 그 가운데 어느 경우에 가장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경우의 선거에서는 입법과정에서 그 정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많은 정당을 골라 나머지 1표를 행사하는 분할투표가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이다. 다만, 경쟁정도가 심한 두 대정당간의 연합은 현실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아주 적고 군소정당간의 연합은 입법을 관철할 가능성이 역시 미약하기 때문에 결국 대정당과 군소정당의 연합만을 고려한다.

사표방지는 물론 연합보장의 의도까지 추가하게 되면 전략적 분할투표의 사례가 증가될 것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의 분할투표를 분석한 히라노(Hirano 2004, 10-11)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 그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략적 분할투표가 아니라 강제적 분할투표이며 이 비율이 분할투표 전체의 30%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설령 2001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제1선호 군소정당이 현단위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민당이나 민주당의 후보자 가운데 좀더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했거나 제1선호 군소정당과의 내각구성 및 입법에서의 연합 형성을 보장할 의도로써 자민당 또는 민주당의 후보자를 지지했다면 얼마든지 전략적 분할투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히라노의 연구에서 강제적 분할투표자의 대부분이 전략적 분할투표자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3) 견제균형 분할투표(balancing split-ticket voting)

피오리나는 미국 연방의회 양원 또는 어느 일원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정당이 달라지는 분할정부가 왜 출현하게 되는가를 공화, 민주 양대정당 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분할투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Fiorina 1996, 특히 59-84). 미국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한 이후에 의회선거에서는 그 후보자의 정당과 다른 정당의 정책적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피오리나는 많은 유권자들이 양대정당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극단적 입장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피오리나의 논리를 수용하여 2표혼합제에서 유권자가 적지 않게 상반된 이념 · 정책적 입장을 보이는 두개의 대정당을 선택하는 분할투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선호순위상 선행하는 대정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그 대정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정당의 후보자를 밀어주는 분할투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구선거에서는 좀더 선호하는 대정당의 후보자에 표를 주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그 후보자의 정당과 경쟁하는 다른 대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견제균형 분할투표이다. 여기서는 사표방지나 연합보장의 목적을 전제로 전략적 분할투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정당간 견제균형을 지향하는 것은 전략적 분할투표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견제균형 분할투표는 유권자의 온건한 정서를 반영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정당간의 정책적 타협과 조정을 지향하는 것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히라노(2004, 10)는 자민당 집권에 익숙한 일본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의석분포가 집권당과 반대당 간에 가능한 한 균형을 취하도록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대표적인 반대당에 표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할투표를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이러한 사례는 전체 분할투표자수의 6.8% 정도를 차지하였다.

4)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

분할투표 가운데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견제균형(비전략적) 분할투표 이외의 것이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이다.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제1선호의 군소정당을 택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대정당 가운데 상대적으로 앞선 선호순위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할투표(대정당/군소정당)이다.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그 어떤 것이든 제1순위 선호의 대정당 또는 군소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그 정당에 이념 · 정책적으로 근접하는 군소정당(대정당을 먼저 선택한다면) 또는 대정당(군소정당을 먼저 선택한다면)을 이어 골라 행하는 분할투표(대정당/군소정당 또는 군소정당/대정당)이다. 견제균형 분할투표는 정의상 비전략적이며 양대정당 간에 표를 나누는 분할투표(대정당/대정당)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선거에서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경쟁구도로 보아 당선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에 있는 다른 군소정당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분할투표(군소정당/군소정당)는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사표방지, 연합보장, 견제균형의 의도와 결부되지 않은 잔여범주는 편의상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범주는 이질적일 수 있지만 앞의 이론적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잡다한 세부유형들을 하나로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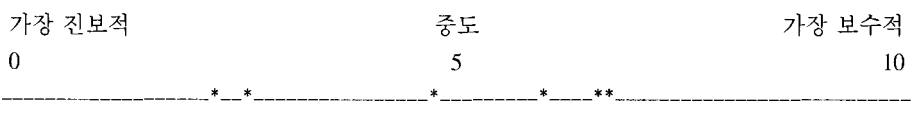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01년 일본 참의원 선거의 분석에서 히라노(Hirano, 10)는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에 정당투표를 하고 지역구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낮은 다른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가 전체 분할투표자수의 16.0%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의 설명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 성격의 비전략적 분할투표이다.

3. 17대 총선의 분할투표에 대한 설명

표 6에서 사례수가 10개 이상인 분할투표의 세부유형은 대정당/군소정당 유형 가운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및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대정당/대정당 유형가운데는 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마지막으로 군소정당/대정당 가운데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을 포함한 6가지이다. 여기서는 이 각각의 분할투표 세부유형을 앞에서 제시한 분할투표 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표 5에서 기타 정당을 제외하는 경우에 5개 정당간 분할투표 세부유형은 원칙적으로 20개가 가능하다. 만약 분할투표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사례수는 기껏해야 5% 남짓해야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26.8%이다. 분할투표는유권자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에 따른 행위이며 체계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할투표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17대 총선 시기에 유권자들이 5개 정



주: a = 민주노동당, b = 열린우리당, c = 유권자 자신, d = 새천년민주당, e = 자유민주연합, f = 한나라당; 사례수는 1284~1307.

그림 1. 17대 총선 유권자의 정당별 이념성향 인식(평균)

당의 이념적 성향에 대하여 대체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권자조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가장 진보적"의 0점에서 "가장 보수적"의 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써 응답자 자신과 5개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평균값을 구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유권자의 경우는 4.6으로 완벽한 중도인 5에 가깝다. 유권자 좌측으로 진보쪽으로 가장 멀리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3.2)이고 그 다음이 열린우리당(3.7)이며, 유권자 우측으로 비교적 가깝게는 새천년민주당(6.3)이 위치하고 좀더 멀리 자유민주연합(7.2)과 한나라당(7.3)이 자리를 잡게 된다.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약간은 진보적이나 대체로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진보적이고,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과 한나라당은 보수인 것이다. 사실, 유권

표 7. 17대 총선 유권자의 정당이념성향 인식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유의수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열린우리당	x	-0.275	0.319	-0.04	-0.146
		(<0.01)	(<0.01)	(0.16)	(<0.01)
한나라당		x	-0.287	0.441	0.499
			(<0.01)	(<0.01)	(<0.01)
민주노동당			x	-0.192	-0.296
				(<0.01)	(<0.01)
새천년민주당				x	0.514
					(<0.01)

주: 사례수는 1141~1266.

자의 투표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권자의 각 정당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간의 상관관계 계수만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같은 뿌리를 갖는 두 정당은 유권자 전체의 수준에서 진보와 보수의 상반된 이념적 색채가 대조를 보이지만 개별유권자들은 아직 두 정당간의 이념적 대조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경우 그림 5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개별 유권자 수준에서도 이념적 친화성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다. 요컨대, 유권자들은 17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정당간 정책연합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및 자유민주연합 간의 보수연합이나 아니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진보연합이 될 것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실제로, 전자 3당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공조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총선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를 찍은 분할투표의 세부유형인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을 표 8의 자료에 기초하여 설명해보자. 이런 식으로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전형적인 정당선호순위는 민주노동당(노)을 가장 선호하고 이보다는 다소 약한 강도이지만 열린우리당(우)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며 한나라당(한)은 아주 싫어하는 편이다. 62명 중 적어도 43명이 이러한 정당선호순위(노≥우>한)를 보여준다. 이 세 정당에 대한 선호의 순위는 이론적으로 다음의 13가지이다: 노>우>한, 노>우=한, 노=우>한, 노=우=한, 노>한>우, 노=한>우, 우>노>한, 우>노=한, 한>노>우, 한>노=우, 우>한>노, 우=한>노 및 한>우>노. 이것을 다시 축약하면 표 8에서와 같은 6가지로 제시된다. 이 부분의 분석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군소정당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양대정당의 각각에 대하여 갖는 선호관계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 등 다른 군소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사표방지 전략투표 이론을 적용하면 노≥우≥한의 선호순위를 갖는 49명의 유권자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분할투표를 한 것은 타당한 행위로 설명된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한나

표 8.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분할투표자 분석

정당선호도(0~10점)	평균	사례수
민주노동당(노)	7.5	62
열린우리당(우)	6.1	62
한나라당(한)	2.2	62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1) 노≥우≥한	49	○	○
노≥우〉한	43		
노≥우=한	6		
(2) 노≥한〉우	3	×	○
(3) 우〉노≥한	7	×	○
(4) 한〉노≥우	3	×	×
(5) 우≥한〉노	0	×	○
(6) 한〉우〉노	0	×	×
사례수 합계	62(100.0%)	49(79.0%)	59(95.2%)

라당보다 적어도 같거나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를 지지했던 것이다. 이 경우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의 설명 내지 예측 적중률은 79%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유권자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정당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이념적 근접성을 토대로 입법연합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 모두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아 그 분할투표 행위의 설명이 용이하지 않은 3명의 유권자만 제외하면(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이들의 행위는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나머지 59명의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분할투표는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에 부합한다. 여기서 이 이론의 적중률은 95.2%이다.

사표방지 목적과 연합보장의 의도를 보완적으로 고려하면 전체 분할투표자의 4분의 1이 약간 넘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분할투표자 행태는 거의 대부분(95.2%)이 해명된다.

표 9.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분할투표자 분석

정당선호도(0~10점)	평균	사례수
민주노동당(노)	6.9	27
열린우리당(우)	5.4	27
한나라당(한)	4.7	27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1) 노≥한≥우	16	○	×
노≥한〉우	11		
노≥한=우	5		
(2) 노≥우〉한	5	×	×
(3) 우〉노≥한	3	×	×
(4) 한〉노≥우	2	×	×
(5) 한≥우〉노	1	×	×
(6) 우〉한〉노	0	×	×
사례수 합계	27(100.0%)	16(59.3%)	0(0%)

주: 당초의 29개 사례에서 정당선호도 결측치로 인하여 2개 사례는 제외.

두 번째로 빈도수가 많은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분할투표는 두 가지 전략적 분할투표 개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될 것인가? 표 9에서 보면 이런 분할투표자 가운데는 민주노동당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편이며 열린우리당은 약간 싫어하는 편인 유권자가 가장 많다. 27명 중 11명 정도가 노≥한〉우의 정당선호순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류가 다른 어느 부류보다 수가 많다.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에 의하면 노≥한〉우의 정당선호순위와 노≥한=우의 정당선호순위를 합친 노≥한≥우가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분할투표와 부합한다. 민주노동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유권자가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보다는 선호순위가 밀리더라도 한나라당을 적어도 열린우리당만큼은 선호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노≥우〉한의 선호순위는 비례대표선거에서 가장 선호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지만 지역구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투표한다는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게 한나라당 후보자를 선택하였다. 아마도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요인에 좌우되어 그렇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이 경우에 사표방지 전략

적 분할투표 이론의 적중률은 59.3%이다. 그렇다면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기반을 별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연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이론을 여기에 적용하기는 무리이며 그 적중률은 0%이다.

세 번째로 분석되는 세부유형은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의 분할투표이다. 이러한 분할투표자들의 정당선호도 평균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좋아하는 수준(6.5)이고 새천년민주당은 그저 그런 편(4.7)인데, 한나라당을 상당히 싫어하는 수준(2.0)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우〉민〉한의 정당선호순위를 가지고 있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3)의 정당선호순위(우〉민≥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물론이고 지역구선거에서조차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에게 표를 찍었다면 그것은 그 후보자와의 개인적 유대나 그의 개인적 자질 및 역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결과였을 것이다. 실제로는 표 10에서 (5)의 한〉민≥우와 (6)의 한≥우〉민의 선호순위를 가진 유권자는 어떤 선거에서나 한나라당에 결코 표를 주지 않았다.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에 비추어 (1)의 정당선호순위만이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의 분할투표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그 적중률은 38.5%로 저조하다. (3)이나 (4)의 선호순위(우〉민≥한과 우〉한〉민)를 가진 유권자의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분할투표는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분할투표와 관련하여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의 하나로서는 이런 분할투표가 호남 유권자(호남 거주 및 출신)의 지역주의 투표를 들 수 있다. 표 10의 분석대상이 되는 13명 유권자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7명, 호남권 5명, 충청권 1명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유권자의 출신지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호남 출신이 많지 않은가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들 유권자에게는 호남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선택의 메뉴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에 이들 가운데 한나라당 선호도와 새천년민주당 선호도가 별 차이가 없는 유권자라할지라도 실제로 새천년민주당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게 된다.

네 번째로 양대정당간 분할투표(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표 10.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분할투표자 분석

정당선호도(0~10점)	평균	사례수
열린우리당(우)	6.5	13
새천년민주당(민)	4.7	13
한나라당(한)	2.0	13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1) 민≥우≥한	5	○	×
(2) 민≥한〉우	0	×	×
(3) 우〉민≥한	6	×	×
(4) 우〉한〉민	2	×	×
(5) 한〉민≥우	0	×	×
(6) 한≥우〉민	0	×	×
사례수 합계	13(100.0%)	5(38.5%)	0(0%)

를 분석한다. 국회의 대통령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이 지지도에 있어서 독주하는 현상이 전개되자 16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헌저지선인 재적의석수 3분의 1을 확보하려고 "거여견제론"을 내세우게 되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점차 상승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탄핵안 통과를 상기시키면서 "거야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즉 탄핵 쟁점에 부수되는 쟁점으로 집권당과 반대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논란을 빚게 되었다. 선거운동의 막바지 시점을 제외하면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과반수 확보를 점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이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견제균형 분할투표 이론의 관점에서는 표 11에서 분석되고 있는 분할투표 사례 전체가 설명이 되어 그 적중률은 100%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흥미로운 질문은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분할투표자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견제균형 분할투표 이론에 비추어 분할투표자들의 정당선호순위는 양대정당만 문제시된다. 이러한 두 세부유형 분할투표자들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정도의 평균을 전체투표자의 그것과 각각 비교해보면 양대정당 중 어느 정당의 선호도를 막론하고 여기서 분석되는 분할투표자 평균이 전체투표자의 평균보다 약간 또는 현저히 높다. 이것은 2표

표 11. 견제균형 분할투표자 분석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전체투표자
정당선호도(0~10점), 평균(사례수)			
열린우리당(우)	5.7(25)	6.0(22)	5.5(1,081)
한나라당(한)	4.2(25)	6.4(22)	4.1(1,081)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1) 우 〉 한	11(44.0)	7(31.8)	600(55.5)
(2) 우=한	11(44.0)	12(54.5)	151(14.0)
(3) 한 〉 우	3(12.0)	3(13.6)	330(30.5)
합계	25(100.0)	22(100.0)	1,081(100.0)
거주지, 사례수(%)			
수도권	13(52.0)	11(50.0)	513(47.5)
강원	0(0)	1(4.5)	37(3.4)
충청	1(4.0)	1(4.5)	112(10.4)
호남	0(0)	0(0)	126(11.7)
영남	11(44.0)	9(40.9)	293(27.1)
합계	25(100.0)	22(99.9)	1,081(100.1)

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경우 23개 사례에서 정당선호도 결측치로 인해 1개 사례 제외.

를 모두 대정당에 주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양대정당에 대하여 더욱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유권자의 정당선호와 무관하게 단지 대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전체투표자를 준거로 하여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분할투표자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두 집단의 정당선호순위상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비례대표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전자 집단은 한나라당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강하게 열린우리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88.0%에 달한다. 이는 전체투표자 중 그와 같은 비율(69.5%)보다 상당히 높다. 한편, 비례대표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후자 집단은 열린우리당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강하게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68.1%인데, 이는 전체투표자의 44.5%보다 현저히 높다. 요컨대, 견제균형 분할투표자의 결정에 있어서 양대정당에 대한 선호순위는 지역구선거에서보다 비례대표선거에서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국적 쟁점

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구선거는 후보자 개인 요인이 고려되는 인물선거의 측면을 철저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 11의 분석은 17대 총선에서 견제균형 분할투표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호남 유권자의 선택 메뉴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막론하고 한나라당은 기피대상이었기 때문에 견제균형 분할투표자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견제균형 분할투표를 유도하는 거여견제론은 호남에서 위력이 전혀 없었지만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강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견제균

표 12.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분할투표자 분석

정당선호도(0~10점)	평균	사례수
열린우리당(우)	6.3	13
민주노동당(노)	4.5	12
새천년민주당(민)	3.9	17
자유민주연합	2.4	12
한나라당	1.4	17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정당선호순위	사례수
(1) 노 〉 우 〉 민	1	(2) 노=우 〉 민	1
(3) 노 〉 민 〉 우	0	(4) 노〉우=민	0
(5) 노=민 〉 우	0	(6) 노=우=민	0
(7) 우 〉 노 〉 민	1	(8) 우 〉 노=민	2
(9) 민 〉 노 〉 우	2	(10) 민 〉 노=우	2
(11) 민 〉 우 〉 노	2	(12) 우 〉 민 〉 노	1
(13) 우=민 〉 노	0		
합계	12		

민 〉 우 〉 노, 우≥민 〉 노를 제외한 투표자의 거주지	사례수	(%)
수도권	2	22.2
강원	0	0
충청	0	0
호남	6	66.7
영남	1	11.1
합계	9	100.0

주: 당초 18개 사례에서 정당선호도 결측치로 인해 사례수 축소.

형 분할투표는 지역주의 투표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의 분할투표를 분석한다. 이 세부유형은 대정당인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선택되고 지역구선거에서는 군소정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후보자가 표를 받는 경우이다. 이는 사표방지나 연합보장의 전략과는 거리가 있고 견제균형의 목표와 무관하기 때문에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가 된다. 표 12는 이러한 분할투표 행태를 보인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 평균을 제시한다. 그 수치로 보아 이들 사이에서 가장 전형적인 선호순위는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한나라당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의 분할투표자들에게는 예외없이 자유민주연합이나 한나라당이 가장 혐오하는 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투표 분석을 위해서는 나머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간의 선호순위에만 주목하면 된다. 세 정당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선호순위는 13가지인데 각각의 사례수는 표 12에서와 같다. 이렇게 밝혀진 정당선호순위에 비추어 의아한 것은 이 분할투표자들이 민주노동당에 표를 줄 이유가 충분한 적지 않은 유권자조차 민주노동당을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12명의 투표자 가운데 노 〉 우 〉 민, 노=우 〉 민, 노 〉 민 〉 우, 노 〉 우=민, 노=민 〉 우, 또는 노=우=민의 선호순위에 부합하는 2명은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었어야 당연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제2순위로 선호하는 우 〉 노 〉 민, 우〉노=민, 민 〉 노 〉 우, 또는 민 〉 노=우의 투표자 7명은 2표 중 어느 1표를 민주노동당에 주었다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경우였다. 다만 민 〉 우 〉 노, 우 〉 민 〉 노, 우=민 〉 노의 선호순위를 가진 3명만이 민주노동당을 배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투표자 12명 중 9명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민 〉 우 〉 노, 우≥민 〉 노에 해당하는 3명을 제외한 9명의 거주지를 확인하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주어진다. 이 9명 중 6명이 호남 거주자이며 2명은 수도권, 나머지 1명은 영남 거주자이다. 호남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거나 이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만을 상대로 하여, 전자의 지역구 후보자와 후자의 정당명부를 선택한 분할투표는 다분히 지역주의 투표의 반영이었다.

지금까지 사례수가 비교적 적지 않은 분할투표의 세부유형을 분석하였다. 투표자의 정당선호에 관한 자료가 확보된 사례수는 표 8의 62, 표 9의 27, 표 10의 13, 표 11의 47, 표 12의 12을 합하여 모두 161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분할투표자 231명

의 69.7%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부유형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체계적인 분석이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유권자가 왜 그렇게 2표를 나누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강의 분석으로 손색이 없다. 표 8~표 10의 경우는 사표방지 또는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표 11의 분석에는 견제균형 전략적 분할투표 이론이 적용된다. 표 12의 분할투표는 앞의 이론들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지역주의 투표라는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었다. 분석결과, 161개 사례 중 80.7%에 해당하는 130개 사례가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 및 견제균형(비전략적) 분할투표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정도의 적중율에 비추어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분할투표는 유권자가 아무 생각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 나름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분할투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할투표를 기타 비전략적 분할투표로 묶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주의 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분할투표도 어느 정도는 지역주의 투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2표병립제는 미시적 수준에서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를, 거시적 수준에서는 지역균열의 정치적 표출을 완화시키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별도의 정당투표가 주어지면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없지 않았던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돌이켜 보자. 표 2에서 유권자의 거주지역과 분할투표 여부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않았지만,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한 영남에서 분할투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호남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분할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표 10과 표 12에 따르면 호남의 분할투표는 그 지역에서 지지기반이 강한 두 정당에 표를 나누어 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표 5를 보면 영남에 강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에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지한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관투표의 비율이 높았다.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로 보아 제1위부터 제5위 정당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가장 약한 지역주의 색조를 갖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일관투표 비율은 가장 낮다. 이런 사실들만 보아도 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1인에게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별도의 1표가 더 주어졌지만 지역주의 투표행태

를 근본적으로 희석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분석은 2표병립제가 지역주의 완화의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전체 분할투표자의 4분의 1 이상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것에 크게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부상한 원인을 찾을 때에 유권자가 별도의 정당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표병립제가 지역주의 투표의 완화 또는 지역갈등 표출의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하는 것은 유권자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집합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개괄적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얻은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과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살펴보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선거결과 통계를 참조; 문화일보 04/4/17), 경북을 제외하고는 후자가 전자보다 어느 정도 높다. 그리고, 호남권에서 열린우리당이 얻은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과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비교하면, 전북을 제외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다소 높다. 지역주의를 희석시키는 2표병립제의 효과가 약간이나마 무시 못 할 정도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정당투표율은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과 다름없이 권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비례대표선거 역시 지역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0%이상의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2표병립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16대 총선에서와 같이 1인1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17대 총선의 결과는 지역갈등 양상을 지금보다 더욱 완연하게 표출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는 지역주의를 현저히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V. 결론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1표와는 별도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하는 1표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 경우 한 유권자가 지

역구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상이한 분할투표가 자연스럽게 초래된다. 이로써 투표참가자 중 분할투표를 행한 유권자의 비율,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정치정향에 비추어 본 분할투표자의 특성, 분할투표의 내용에 따른 유형, 그리고 분할투표의 원인과 결과는 한국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17대 총선 직후 학술적 연구를 위해 실시한 유권자표본조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주제들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17대 총선에서는 전체투표참가자 중 2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의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했다고 추정된다.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서는 대학생의 분할투표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직업유형 범주의 유권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분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정치정향 변수로서는 유권자의 이념성향,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분할투표 성향이 강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중립적인 선호를 갖는 유권자가 호의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보다 분할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요컨대, 정치적 지식을 갖추고 진보성향이 강하며 민주노동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하여 분할투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분할투표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정치정향적 특성은 어떤 내용의 분할투표가 많이 발생하였는가를 암시한다. 지역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전체분할투표자의 4분의 1을 약간 넘는다(26.8%). 그 다음으로, 지역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를,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가 전체분할투표자의 12.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지역구선거에서 양대정당 중 어느 당의 후보자를 고르고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투표만큼은 민주노동당에 준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4명 정도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자와 열린우리당 정당명부를 택한 분할투표(전체분할투표자의 10.8%), 또한 그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 지역구 후보자와 한나라당 정당명부를 고른 분할투표(전체분할투표자의 10.0%)가 많았다. 즉 양대정당을 나누어 지지한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2명꼴이다. 이어서, 새천년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지지하고 열린우리당에 정당투표를 한 유권자는 전

체분할투표자의 7.8%이며, 열린우리당 후보자를 밀고 새천년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는 전체분할투표자의 5.6%이다. 줄여 말하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2표를 나누어 지지한 유권자는 분할투표자 매 1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이다. 그 밖의 분할투표는 정당간의 다양한 배합을 보여준다.

지역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것은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민주노동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선호대로 민주노동당 정당명부에 표를 주게 되지만, 지역구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경쟁력이 양대정당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표화를 우려하여 양대정당 중 좀더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찍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후보자 지지와 민주노동당 지지의 분할투표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합보장 전략적 분할투표에 해당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향을 매우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 두 정당 중 어느 것이든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17대 국회에서 양당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투표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대정당에 2표를 나누어 지지한 유권자는 사표방지나 연합보장과 같은 전략적인 의도 대신에 양대정당이 의정과정에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에 2표를 나누어 지지한 분할투표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분할투표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17대 총선에 도입된 2표병립제가 유권자의 선택행위 수준에서 창출한 중요한 효과이며, 이것은 결국 민주노동당이 제3당의 지위로 부상하는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17대 총선에서의 전형적인 분할투표자는 민주노동당 지지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세력은 의석분포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관투표자들 뿐만 아니라 분할투표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이러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투표선택을 하였다. 아울러, 호남 거주 또는 출신 유권자의 분할투표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선택의 메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17대 총선에서도 종전에 비해서는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주

의 투표성향의 굴레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비례대표선거를 위해 별도의 정당투표를 유권자에게 부여한 제도변화를 간과하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세력부상을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2표병립제가 17대 총선에서 제3당 이하 정당의 대표성을 크게 제고시켰다든가 지역균열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정도를 현저하게 완화했다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2표병립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7대 총선에 적용된 2표병립제가 내용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당투표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석의 비중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부록: 용어표기 정리

본 논문의 국문표기	영문표기	다른 국문표기
혼합제	mixed system	혼합형 제도
1표혼합제, 1인1표혼합제	one-vote mixed system	
2표혼합제, 1인2표혼합제	two-vote mixed system, dual-vote mixed system	1인2표제
재투표제	second ballot system, double ballot system, two-round system(TRS)	
2표병립제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MMM), parallel system, gap system, *Grabenwahlsystem* (독일어 표기)	혼합다수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竝立)제, 일본식 2표병립제, 구형(溝型)제도
2표혼합비례제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MMP), the German system, 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system, additional member system, compensatory PR	독일식 2표제, 2표병용(倂用)제, 인물화된 비례대표제, 추가의석제, 보상적 비례대표제
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ticket splitting, vote splitting, split voting	
일관투표	straight-ticket voting, straight voting	일괄투표
정당일괄투표	party bloc vote	
완전연기투표	bloc vote, block vote	
선출정수, 선거구당 의석수	district magnitude, constituency size	선거구 크기
의원정수	assembly size	
일석 선거구	single-seat district, single-member district	일인 선거구, 일인선출 선거구, 소선거구
다석 선거구	multi-member district multi-seat district	다인 선거구, 다인선출 선거구, 중대선거구
다수제, 다수대표제	plurality system, majoritarian system	

부록: (계 속)

본 논문의 국문표기	영문표기	다른 국문표기
단순다수제	plurality, simple plurality, relative plurality, first-past-the-post (FPTP)	상대다수제, 1위대표제, 종다수제, 최다수제, 비교다수제
절대다수제	majority, simple majority, absolute majority	과반수제
비례대표제, 비례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R)	
준비례대표제, 준비례제	semi-PR system	
선거구 계층, 선거구층	district tier, constituency tier	
지역구, 지역선거구	(subnational) electoral district, constituency	
전국구, 전국선거구	nationwide (at-large) district	
선거구획정	(apportionment and) districting, redistricting	
당선결정방식, 의석배분규칙	seat allocation rules, electoral formula	의석배분방식
선거인(유권자)당 투표수	number of ballot per elector(voter)	
최대잔여방식	largest remainder system(LR), Hamilton method	최대잔여법
헤어 기준수	Hare quota, simple quota, natual quota, Niemeyer formula	
봉쇄조항	legal threshold, exclusion clause, *Sperrklausel*(독일어표기)	의석확보최소요건
기표방식	ballot structure	투표구조
정당명부	party list	
구속명부	closed system, rigid system	고정명부, 폐쇄명부
개방명부	open system	자유명부
전략적 투표	strategic voting, tactical voting	
순수투표	sincere voting	
비순수투표	insincere voting, sophisticated voting	

참고문헌

강원택. 2004. "탄핵 이슈와 17대총선."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김영태. 2002. "1인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독일, 뉴질랜드,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1』, 207-249.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왕식. 2004. "1인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선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찬욱, 1997.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향." 『국가전략』 3권 1호, 249-278

_____. 2000a. "선거제도 개관." 박찬욱 편. 『비례대표선거제도』, 3-41. 서울: 박영사.

_____. 2000b. "IMF 이후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와 국회의 역할." 『IMF체제 이후의 한국정치의 비전과 전략』, 54-88. 서울: 국회사무처.

양건. 1995.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 병립제가 바람직." 『21세기 나라의길』 통권 36호, 26-36

윤종빈. 2004. "17대 총선과 탄핵쟁점."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이현우. 2004.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정영태. 2004. "진보정당의 성공과 향후 과제."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정혜숙. 2004. "17대 총선과 지역주의."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조성대. 2004. "정치이벤트, 캠페인, 그리고 17대 총선: 집합자료분석을 통한 탄핵쟁점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999. 『의정감시』 제4호.

Benoit, Kenneth, Daniela Giannetti, and Michael Laver. 2000. "Strategic Voting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Italian Case."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New York: Wiley.

Farrell, David M. 1997. *Comparing Electoral Systems*. London: Prentice Hall.

Fiorina, Morris. 1996. *Divided Government*, 2nd ed. Boston: Allyn & Bacon.

Gschwend, Thomas. 2003. "Ticket-Splitting and Strategic Voting in Mixed Electoral Systems." Arbetspapiere 61, Mannheimer Zenturm fuer Europaeische Sozialforschung.

Gschwend, Thomas, and Ron Johnston, and Charles Pattie. 2003. "Split-Ticket Patterns in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ion Systems: Estimates and Analyses of Their Spatial Variation at the German Federal Election, 1998."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109-127.

Hirano, Hiroshi, 2004. "Split-ticket Voting under the Mixed Electoral System in Japan." 『日本選擧學會 紀要』 제2호, 1-19.

Jesse, Eckhard. 1988. "Split-Vot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 Analysis of Federal Elections from 1953 to 1987." *Electoral Studies* 7, 109-124.

Karp, Jeffrey A., Jack Vowles, Susan A. Banducci, and Todd Donovan. 2002. "Strategic Voting, Party Activity, and Candidate Effects: Testing Explanations for Split Voting in New Zealand's New Mixed System." *Electoral Studies* 21, 1-22.

Kohno, Masaru. 1997. "Voter Turnout and Strategic Ticket-Splitting under Japan's New Electoral Rules." *Asian Survey* 37, No. 5, 429-440.

Massicotte, Louis, and André Blais. 1999. "Mixed Electoral Systems: A Conceptual and Empirical Survey." *Electoral Studies* 18, 341-366.

Park, Chan Wook. 2002. "The Rules of the Electoral Game for the the National Assembly in Democratic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1호, 167-195.

Reed, Steven R. 1999. "Strategic Voting in the 1996 Japanese General Ele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2, No. 2, 257-270.

McAllister, Ian, and Stephen White. 2000. "Split Ticket Voting in the 1995 Russian Duma Elections." *Electoral Studies* 19, 563-576.

Shugart, Matthhew Soberg, and Martin P. Wattenberg. 2001.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A Definition and Typology." Shugart and Wattenberg, eds.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The Best of Both Worlds?* 9-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agepera, Rein, and Bernard Grofman. 2003. "Mapping the Indices of Seat-Votes Disproportionality and Inter-Election Volatility." *Party Politics* 9, No. 6, 659-677.

ABSTRACT

Who Split the Vote How and Why? Korean Voters' Choice Behavior in the April 2004 General Elect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

Chan Wook Park |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ixed-member majoritarian (MMM)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s held in April 2004. Slightly over 20 percent of the total voters seemed to have split their vote. College students, ideological progressives,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identifiers were highly likely to engage in vote splitting. Roughly, four of every ten vote splitters chose a candidate of the Open Uri Party or Grand National Party (GNP) in the plurality election and also supported the DLP in the nationwid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election. This pattern of vote splitting might have resulted from strategic calculation by those voters who preferred the DLP the most but did not want to have their vote wasted in the plurality election. They sincerely voted for the DLP in the PR election and strategically voted for an electable candidate of a major party preferable next to the DLP. Of such vote splitters, the Uri Party supporters in the plurality election could be alternatively seen as having attempted to insure coalition between the Uri Party and DLP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other two of every ten vote splitters chose between two major parties, the Uri Party and GNP. This pattern of choice behavior could be found among the voters who intended to see the politics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two large parties. Still, another one of every ten vote splitters chose between the Uri Party and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This pattern could be a variant of regional voting, since both the Uri Party and MDP have a strong electoral base in the Honam region. Finally, the remaining three of every ten vote splitters combined any two of political parties in the other manners for their vote splitting. The

introduction of a MMM system is significant for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DLP which finished third in the April 2004 elections. Yet its electoral strength did not become sufficient to weaken the two-party format of political competition. This was because vote splitting was that much spread out and also even vote splitters stayed with two major parties or two regionally-based parties. More basically, a smaller percentage of PR seats relative to those elected under plurality could not decisively contribute to the DLP's building of a stronger position than now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